

전국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본격 실시되고, 구제역 사태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육성해온 친환경농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수도권 학교 급식 농산물 납품 급증

서울과 수도권 등의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과 쌀 납품량이 급증하는가 하면 전국을 휩쓴 구제역 여파에도 '청정'지대를 유지해온 덕분에 소·돼지고기의 도축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학교급식 시범사업 광역거점모델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대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 22개 시·군 9만7460농가에서 9만8112ha가 저농약배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19만4000ha)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2005년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빛 발하는 전남 친환경농업

육성해온 결과로, 지난 2004년 경지 면적의 1.3%(4057ha)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불과 7년만에 무려 25.8배(9만8112ha)로 끌어 올린 것이다.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질적으로도 한 단계 발돋움했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농업인 유기농의 경우 지난해 인증 면적이 3323ha에 달해, 2위인 경기(1972ha), 3위 경북(1807ha)을 압도하고 있다.

축산 분야도 2008년부터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 축사 시설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전국 1위(2028 농가)의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을 휩쓰는 구제역에도 '청정' 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난 설에는 전남산 소·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축량이 늘어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 =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굳

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 등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과 쌀 납품량도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서 서울·수도권 지역 269개 초등학교에 50종에 이르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07개 중·고등학교와 보육 시설에는 친환경 쌀을 납품했다. 전남도는 특히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구제역 청정 지대 도축량 크게 늘어

로 확산하는데다, 구제역 사태 등으로 안전 먹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 800개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보육시설까지 1만곳에 전남산 친환경쌀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농림식품부의 학교급식 시범사업 광역거점모델에 선

정된 것을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서는 등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국비 52억원을 지원받아 나주·순천·장성의 3개 센터를 중심으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영암군과 함께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음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대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국회의원 17명 발의 '과학벨트법 개정안'

민주 지도부 외면... 국회상정 위기

광주·전남지역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제과학벨트법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학벨트법 개정안)'이 민주당 지도부의 외면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국회 상임위에 도상정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3일 민주당은 국회 교과위에서의 과학벨트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합의 처리 등을 내세우며 충청권에 입지를 명시한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의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병합 심리를 외면하고 합의 처리를 요구한 것은 당론

으로 채택된 바 있는 변재일 의원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사실상 간접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모 교과위원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과학벨트법 개정안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있어 좀 관측스러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냈다.

또한, 국회 교과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김영진 의원의 과학벨트법 개정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대전, 대구를 '3각 벨트'로 과학벨트를 구축하자는 김영진 의원(광주 서울)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지도부의 외면과 충청권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국회 상임위 상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다고 해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각 지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교과위에서 논의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안정한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일 광주지역 일부 주유소의 무연 보통 휘발유 가격이 ㄹ당 1985원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ㄹ당 19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ㄹ당 1978원으로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평동산단 외국기업 유치 청신호

4만평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광주 평동산단 4만평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망 외국기업 유치가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산구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 내 13만 2000㎡(4만평)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대지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994년 10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평동1차 산단의 공장용지 95만9000㎡(29만평)가 모두 소진됨으로써 그동안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확대 지정됨으로써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광학 레이저 분야의 세계적인 핵심기술 보유기업인 미국 RMI사,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중국의 토폴레이 솔라사, 미국의 금형업체인 필로스텍사 등 우수 외국기업 유치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

는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부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가 3년간 전액 면제되며 이후에는 2년간 50%가 감면된다. 지방세도 15년간 전액 감면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휘발유값 폭등...광주 ㄹ당 2000원 육박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광주에도 보통 휘발유 가격이 ㄹ당 2000원대를 육박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의 가격 비교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신영주유소의 무연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이 ㄹ당 1985원까지 올랐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다른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대부분 ㄹ당 1900원 안팎을 기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주유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조만간 ㄹ당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광주와 전남지역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ㄹ당 각각 1875.55원, 1872.68원으로 한 달 사이 ㄹ당

50원이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크게 뛰어들었다.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호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ㄹ당 1799원까지 올랐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주유소 경유 가격은 ㄹ당 1700원대에 이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ㄹ당 2255원까지 올린 주유소가 등장했다.

한편,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 확산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 영향으로 두바이의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해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거래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0달러(2.44%) 오른 109.04달러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FC 내일 개막전 무료입장 쿠폰(18편) 오려 가세요

강진군수가 국사범입니까? 대역죄인입니까?

□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던 말입니까? 광주시민·전남도민 여러분, 강진군이 장학기금 문제만으로 감사헌 감사 3번, 경찰 수사 2번 받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 2009년 9월 감사원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10월에 2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무혐의 종결하면 화를 낼지 모르니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마무리짓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 주변 고마운 분의 판단으로 결과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3차 감사를 2010년 3월부터 무려 4개월동안 받았었습니다. (장기 감사로 극심한 압박을 느낀 담당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해버리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 3차 감사가 시작된지 1년만인 지난 2월 22일 감사원은 황주홍 강진군수를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습니다. (30여명에 이르는 강진교육 관련자들을 그토록 철저히 감사하고 나서, 결국 예상대로 강진군수 한사람 수사요청하고, 끝난 것입니다.)

□ 1차 경찰수사는 2010년 4월에 있었습니다. 전남도경 수사하였는데, 혐의사항없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차 수사는 광주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경 시작되었다 합니다. 며칠 전(2월 24일)에는 광주시경 수사요원 6명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갔

습니다. (강진군 관할기관인 전남도경을 놔두고, 광주시경에서 3개월 동안 내사해온 이유가 강진에 장학금내 회사 소재지가 광주여서라지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수사 최종목표가 강진군수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기탁업체 소재지가 강원도 라면서 강원 도경이 전남 강진군수를 3개월째 비밀리에 내사하고 있다면 설득력 얻기 어렵겠습니까?) 광주시경에서 압수수색들어온 날짜도 '절묘' 합니다. 황주홍군수의 선거법 대법원 (공정적) 확정판결이 있던 2월 24일 오후 2시, 3개월내내 내사해오던 경찰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시점도 바로 그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 3차 감사때 감사관에게 "대한민국 감사원이 이렇게 한가한 조직이나? 한번하고 두 번해서 별일없으면 별일없는거지, 이젠 감사헌 남용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1,2차 감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번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전남도경에서 문제없다고 수사종결했는데, 어떻게 몇개월만에 광주시경에서 반복 수사하는거냐?"하고 물었을 때, "전남도경 수사 사실을 몰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 세 차례의 감사원감사와 두 차례의 경찰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만도 한 특권은 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언만으로도 수사적 판단에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해간 자료들도 이미 적년에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들하고 다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수사를 종결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공직사회를 이토록 오래오래 두려움으로 습족이며 일순간에 하지 않습니다. 강진군청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경찰수사 목표가 장학기금인지, 황군수 개인인지 밝혀줄 것도 정식 요청합니다.

□ 장학금 조성운동에 나서기 전인 2004년 당시 강진교육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관내 5개 고교 전체가 정원미달이었습니다. 교육문제때문에 강진을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매일 50명 안팎이었습니다. 강진 공직자들과 군민여러분들과 향우들께서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진교육이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3년만에 5개 고교 전체가 정원을 채우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교육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이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강진고는 개교 25년만인 2006년 서울대학교에 처음 합격자를 냈습니다. (강진고는 6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요셉여고 역시 개교 48년만인 2008년 처음 서울대 합격생을 냈습니다.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는 농업계로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부로 부터 「마이스터고」지정이 유력시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전면에 소재한 성전고는 금년초 1학급이 증설되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진군 교육성공」은 전남교육청에 의해 2009년 국정감사때 수백사례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전국 언론으로부터 과분한 칭송과 평가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2009년 4월 4일)

는 「지역사회힘으로 공교육살려낸 강진군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사설(社說)까지 실으며 '기적'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 장학금 모금은 강진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진군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한 편이긴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장학금 조성운동은 지금 유행처럼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왜 유독 강진군만이 집중해서 반복적 검치기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강진군수가 무슨 국사범(國事犯)입니까? 아니면 대역죄인(大逆罪人)이라고 되는 것입니까?

□ 우리는 지난 몇 차례의 감사와 수사에서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혐의처 수사와 감사를 거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 공무원들의 노력은 강진주민으로서 의무의 최소 실천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강진교육 살리기운동」은 훈장까지는 몰라도, 칭찬받고 긍정평가받은만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다시 한번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합니다. 양식있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소중한 의사표현을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011년 3월 강진군 관계 공무원 일동 드림